

법무매거진

변호사 130명

“文정권 검찰 인사는 수사 방해, 법치 유린 중단하라”



변호사들이 지난 1월 8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지난 1월 17일 발표했다. 이들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130명은 이날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 같이 지적하면서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에는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한 함정호·천기홍·신영무·하창우·김현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며 ‘이번 검찰 인사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비판이다.

변호사들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직접 수사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바꾸는 직제 개편안을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신라젠 주식거래 의혹 등 폐지 대상 수사부서들이 맡은 주요 사건 수사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는 것인가?”라며 “현 정권의 수사 방해 시도가 강압적일수록 국민들은 더욱 더 의혹이 증대하고 치명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미애(왼쪽) 법무장관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니다. 국민이 준 권력이다.”라며 “(인사권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反)하는 것이 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실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다. 일시적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은폐할 수는 없다.”면서 ‘역사를 보더라도 진실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현 정권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더욱 더 큰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조선일보)